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중미관계 변화와 관련*

신 상 진**

- I. 서론
- II. 미국의 대중정책과 중미관계 변화
- III. 중미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 IV.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가 중미 사이의 거대 전략게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는 가정 아래, 시진핑 집권 1기 중미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 및 북핵 정책 조정을 분석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2012년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정책 사이에 연계성이 존재했는지를 논의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중미 간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는 중국이 북한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을 막아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를 중시하여 북한

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중국과 북한 지도부 사이에 접촉과 교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협력 상대로 인식하여 중미관계가 협력적으로 전개 되었을 때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기 보다는 북한문제 및 북핵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

주제어: 중미관계, 중국의 대북정책,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 이 논문은 2017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

I. 서론

2012년 말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 직을 물려받은 뒤 시진핑(習近平)은 대내적으로는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세적 행보를 도모해왔다. 시진핑 지도부는 ‘평화발전’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주권과 영토문제 등 자국의 핵심이익과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타협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호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¹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은 2010년 이래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태 재균형’ 전략과의 충돌을 야기하게 되었고, 중미관계에서 협력보다는 대립이 두드러지도록 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과 미국은 정상회담과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인문대화’ 등 다양한 접촉채널 가동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 왔지만, 군사안보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서도 양국 간 대립구도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중국은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의하여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것이니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동중국해지역에 방공식별구역(China Air Identification Zone: CADIZ)을 선포하고 남중국해 압초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주권 지위를 공고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공세정책은 일본과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역외 강대국인 미국을 끌어들이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다.²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아시아지역에 빈번하게 전개되었고, 중미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대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 전략가들은 신흥강대국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축출하여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중국 포위정책을 주문했고, 중국은 주변국외교 강화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 추진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고자 했다. 이에 중미관계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 ‘투기

¹ 시진핑은 2013년 1월 28일 “흔들림 없이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주제로 3차 정치국 집단학습을 개최하고,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하되 국가 핵심이익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원칙은 시진핑 시기 줄곧 중국의 외교원칙으로 강조되어 왔다. “習近平定調外交方略：和平發展絕不犧牲核心利益.” 〈<http://china.dwnews.com/2013-01-29/59103202.html>〉 (검색일: 2013.01.29.); 鄭必堅, “21世紀第二個十年的中國和平發展之路,”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13), pp. 1~8; 楊潔篪, “做好新形勢下外交工作的行動指南,” 『中國外交』, 第2期 (2013), pp. 3~5.

² Paul Godwin, “Asia’s Dangerous Security Dilemma,” *Current History*, vol. 109, no. 728 (September, 2010), pp. 264~266; Christian Le Miere, “Rebalancing the Burden in East Asia,” *Survival*, vol. 55, no. 2 (April-May, 2013), pp. 31~41.

디테스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었다.³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미 행정부 등장 이후 중미관계가 갈등요인을 잠재운 채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경선과정과 당선인 시절 대만문제와 무역문제 등에서 대중 초강경정책을 예고했으나,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다. 시진핑도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요새화 행보 중단 및 대미 무역역조 개선조치 등을 통해 트럼프의 관계개선 요구에 적극 화답하고자 했다. 북핵문제가 미국의 최대 안보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중미 간 전략 협력분위기가 조성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미사일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중 협력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여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무역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문제와 대만문제에 대해서까지 중국에게 일정 부분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 트럼프의 대중정책 전환은 중미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양국이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다룰 수 있고, 중국이 미국의 북핵 및 북한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미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 및 중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⁵ 이러한 시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국내의 기존 연구는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적으로 미국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겠으나, 중국과

³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14); John H. Maurer, "A Rising Power & the Coming of a Great War," *Orbis*, vol. 58, issue. 4 (Fall 2014), pp. 500~520; 蔡琴紅, "中美關係中的修昔底德陷阱話語,"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16), pp. 13~19; 金鵬, "中美不會陷入修昔底德陷阱的十大理由," <<http://global.dwnews.com/news/2015-09-27/59684567.html>> (검색일: 2015.09.27.).

⁴ Michael E. O'Hanlon and James B. Steinberg, "Can Donald Trump avoid a dangerous South China Sea showdown?,"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7/01/20/can-donald-trump-avoid-a-dangerous-south-china-sea-showdown>> (검색일: 2017.09.28.); Panos Mourdoukoutas, "To Stop Kim Jong-Un, China Needs A Big Prize: The South China Sea," <<https://www.forbes.com/sites/panosmourdoukoutas/2017/09/07/to-stop-kim-jong-un-china-needs-a-big-prize-the-south-china-sea/#2ed7876e6df1>> (검색일: 2017.09.28.).

⁵ 중국 내 대표적 중미관계와 한반도정책 전문가인 칭화대학 추수룡 교수도 "미중관계가 안 좋으면 중국은 미국의 희망에 따라 북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중미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강조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17.07.10.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미국문제를 다루는 중국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 두 나라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질서에 점점 더 핵심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진입하였으므로 학술적으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미관계와 중북 간 동맹관계의 상관관계에 천착한 박홍서의 연구, 그리고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미·중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설명한 홍은정의 연구가 그나마 국내에서 시도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⁶ 그러나 박홍서의 논문은 중미관계가 중국의 대외 및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던 후진타오시기를 분석한 연구이고, 홍은정의 연구는 시진핑 집권 초기와 트럼프 집권 이후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음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가 중미관계라는 동북아 상층구조에서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 사이의 거대 전략게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는 가정 아래, 시진핑 집권 1기 중미관계를 대립의 구조화 시기와 전략적 타협 모색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중미 전략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및 북핵 정책에 어떠한 변화와 조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미국의 대중정책과 중미관계 변화

1. ‘아·태 재균형’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 간 대립의 구조화

2012년 오바마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뒤 중미는 다양한 대화와 접촉채널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양국관계는 전략경쟁이 날이 갈수록 구조화되고 ‘갈등 속의 협력’으로부터 ‘협력 속의 갈등’ 관계로 전환되었다.⁷ 중미 사이의 대립관계는 안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무역 및 정치외교 분야까지 전방위에 걸쳐 구조화 되는 양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

⁶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6), pp. 103~122; 홍은정,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9권 4호 (2016), pp. 75~104.

⁷ 정재호, “2013년 시점에서 평가하는 미·중관계,” 『2013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 p. 129; 정재호, “미·중관계에서의 상호인식의 문제,” 『2014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5), p. 181.; 정재호, “2015년 미·중관계의 평가와 양국 간 상호인식(II),” 『2015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6), p. 206; 牛泪, “中美進入結構性對抗時代,” <<http://blog.sina.com.cn>> (검색일: 2016. 04.05.).

시기 중미 대립은 미국이 '아·태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강화하고 중국이 '신형 대국관계' 구축 제의와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통해 대응하면서 구조적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은 오바마 집권 1기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 진화한 것인데, 미국이 외교안보전략의 중심을 유럽과 중동지역으로부터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되었다. 미국은 아시아가 미국경제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 아래, 아·태지역 동맹국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와 베트남 등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지역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했다.⁸

이를 위해 오바마 미 행정부는 2011년 예산통제법에 의거 2020년까지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미군 주둔을 오히려 강화하고 미 해군 전력의 60%를 이 지역에 이동 배치시키겠다는 구상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갔다.⁹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 동맹국에 최첨단 전략무기를 증강 배치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한편, 필리핀에 미군을 다시 주둔시키고 베트남 및 인도 등 중국과 잠재적 적대국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지배권을 강화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활동은 특히 중일 간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지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강도 높게 전개되었다. 미국은 이들 지역에 공군기와 해군 함정들을 빈번하게 투입하여 지역질서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강화시켜 왔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조치는 '공해전투(air-sea battle)'라는 이름 아래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 A2AD)' 능력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¹⁰ 미국 정부가 한국의 탄핵정국과 북핵 위기를 십분 이용하여

⁸ Gilbert Rozman, "Reassessing the U.S. Rebalance to Northeast Asia," *Orbis*, vol. 59, issue. 3 (Summer 2015), pp. 348~360; Ashley J. Tellis,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A U.S. Strategy for Confronting China'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4 (Fall 2013), pp. 109~124; Kai Liao, "The Pentagon and the Pivot," *Survival*, vol. 55, no. 3 (June-July, 2013), pp. 95~114.

⁹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pp. 56~63;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http://archive.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7.09.28.); 張茗, "奧巴馬政府亞太軍事再平衡剖析," 『現代國際關係』, 第4期 (2013), pp. 37~44.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가속화 한 이유도 북핵·미사일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 있었다. 따라서 오바마 2기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은 다분히 ‘도광양희(韜光養晦)’ 전략을 폐기하고 공세적 외교전략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시작한 중국을 군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오바마 미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했다.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신속하게 대내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떠오른 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했고,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반테러전을 벌이느라 국력을 소모하는 사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가는 중국을 시급히 견제해야 했다. 2013년까지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제무역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체결, 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경제지대 창설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합의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이 지역에서 미국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미국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오바마 집권과 함께 미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을 적극 추진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했다.¹² 2015년 10월 TPP 타결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TPP를 경제적 측면의 ‘아·태 재균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나타내 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겠다.¹³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 다자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역내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전임 정부시기와 달리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 지역 다자대화에 국무장관을 대표로 파견하고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정상회

¹⁰ 徐瑤, “冷戰後美國亞太軍事基地體系的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第9期 (2013), pp. 25~31; David. Kearn, Jr., “Air-Sea Battle and China’s Anti-Access and Area Denial Challenge,” *Orbis*, vol. 58, issue. 1 (Winter 2014), pp. 132~146.

¹¹ Joseph Nye, “China’s century is not upon us,” *Financial Times*, May 18, 2010.

¹² 杜蘭, “美國力推跨太平洋伙伴關係戰略論析,” 『國際問題研究』, 第1期 (2011), pp. 45~51; 楊伯江, “美國戰略調整背景下日本全面正常化走向探析,” 『國際政治』, 第6期 (2013), pp. 20~26.

¹³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10/05/statement-president-trans-pacific-partnership>> (검색일: 2017.07.18.).

의(East Asia Summit: EAS)에 참석하는 한편, 아세안 정상들과 ‘10+1’ 회의를 개최함으로써,¹⁴ 아시아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EAS 참석을 위한 여정이었지만, 2012년 11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후 캄보디아와 함께 태국과 미얀마를 첫 번째 순방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동남아에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 국무장관이 1955년 이후 반세기가 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관계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온 미얀마를 대중 견제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¹⁵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동안 티벳 독립 운동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2차례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환대했던 것도 티벳문제를 중국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처럼 미국이 군사안보, 경제무역 및 정치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 중국 압박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역내 영향력 확대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의하는 한편 주변국 외교노력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통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우선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첫해 성사된 미국 방문 시 오바마에게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중미관계를 과거의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과는 달리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不衝突, 不對抗, 相互尊重, 合作共贏)’의 새로운 협력적 강대국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지위와 이익에 중국이 도전하지 않을 것이니, 미국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대만과 티벳 등 중국의 내정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중국이 영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문제 등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¹⁷

¹⁴ 부시 정부시기에는 미국이 이라크전 수행 등 중동문제를 중시하면서 ARF 외무장관회의에는 국무부 부장관을 대표로 파견해 왔다.

¹⁵ 劉德會, “美緬關係的改善及對中國的影響,” 『國際政治』, 第6期 (2014), pp. 42~48; 杜蘭, “美國調整對緬甸政策及其制約因素,”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2), pp. 40~50.

¹⁶ 오바마는 티벳 유혈사태 55주년이었던 2014년 2월 21일과 2016년 6월 15일 백악관에서 달라이 라마와 회견을 가졌다.

¹⁷ 于洪君, “中美構建新型大國關係的意義與前景,” 『國際問題研究』, 第5期 (2013), pp. 1~9; 達巍, “構建中美新型大國關係的路徑選擇,” 『世界經濟與政治』, 第7期 (2013), pp. 59~73; 楊潔勉, “新型大國關係: 理論, 戰略和政策建構,”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13), pp. 9~19.

그러나 2012년 일본의 조어도/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중일 간 군사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하여 중국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¹⁸ 또한 2014년 이후 남중국해지역에서 가속화된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화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유관국과의 군사협력 강화와 국제기구 제소 및 핵추진 항모, 미사일 구축함, B52 전략폭격기 등 군사력 투입을 통해 대응해 왔다.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 군사력 전개는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아시아지역을 자국의 세력범위로 편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장기전략목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¹⁹ 양국 간 전략적 불신이 컸기 때문에 중국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가 구축되기 어려웠고, 아·태지역에서 중미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빈번해졌다.

2013년 이래 중국이 국가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 역시 미국의 아·태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의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해 중국과 유럽대륙을 연결한다는 거대 전략구상(grand strategic initiative)이다. 이는 중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자 국가통합정책임과 동시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중화부흥을 위한 대외전략이기도 하다.²⁰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적극 개입정책에 직면하여 그 탈출구의 일환으로 ‘서진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²¹ 중국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및 중동과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전략에 경

¹⁸ 楊伯江, “美國戰略調整背景下日本全面正常化走向探析,” 『國際政治』, 第6期(2013), pp. 20~26; 오바마는 2013년 1월 다오위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범위 내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¹⁹ Jeff M. Smith and Joshua Eisenman, “China and America Clash on the High Sea: The EEZ Challenge,”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china-america-clash-the-high-seas-the-eez-challenge-10513>> (검색일: 2017.09.29.); 張立偉, “美中關係的危險十字路口,” <<http://opinion.dnews.com/news/2014-07-13/59488907-all.html>> (검색일: 2014.07.13.).

²⁰ ‘일대일로 영도소조’ 리더 구성을 통해서도 중국의 이러한 전략의도가 엿보인다.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이자 정치국상무위원인 장가오리가 일대일로 영도소조 조장, 정치국위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후닝, 경제무역과 대외원조를 주관하는 왕양, 외사담당 국무위원 양계츠 그리고 국가민족사무위 주임을 역임하고 중앙 서기처 서기로 있는 양징 4명이 부조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²¹ 미국의 동진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이 서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국내 최초의 주장은 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지쓰의 다음 글을 참조. 王輯思, “西進, 中國地緣戰略的再平衡,”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2-10/3193760.html> (검색일: 2012.10.17.).

제교류협력 확대 및 통합전략으로 응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낙후국가 개발 지원 명분 아래 중국이 주도하여 2015년 창설된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도 미국과 일본 주도로 운용되어 온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²² 미국과 일본이 AIIB의 창설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 온 것도 이러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미 간 대립관계가 구조화되면서 중국은 주변지역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중점 대외 정책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한 최고지도부 인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2013년 10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적극 개입정책에 대한 위기의식에 기인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및 한반도 등 주변지역에서 동시에 고조된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²³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친중 세력으로 포섭하여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하에, 중국은 기존 우호세력 파키스탄,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과의 친선관계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까지 중요한 포섭대상으로 설정하여 외교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은 중국의 강경외교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 증대와 미국의 개입정책 강화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아시아신뢰구축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 in Asia: CICA)에서 제기한 “아시아 안보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아시아 신안보관’에 공감하는 지역 내 여론도 높지 않았다.²⁴ 역내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외 균형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오바마 집권 2기와 시진핑 등장이 맞물린 2012년 이후의 중미관계는 군사안보, 경제무역 및 정치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경쟁과 대립이 구조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으로 미국을

²² 중국 정부는 AIIB가 IMF나 ADB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반대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王達, “亞投行的中國考量與世界意義,” 『東北亞論壇』, 第3期 (2015), pp. 48~64.

²³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周邊戰略形勢與中國周邊戰略』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의 결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周邊戰略形勢與中國周邊戰略,” 『現代國際關係』, 第10期 (2013), pp. 1~39; 高程, “周邊環境變動對中國崛起的挑戰,” 『國際問題研究』, 第5期 (2013), pp. 33~45.

²⁴ 아시아신뢰구축회의 개막시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은 “積極樹立亞洲安全觀, 共創安全合作新局面,” <<http://kp.china-embassy.org/chn/zgxw/t1158407.htm>> (검색일: 2014.05.22.).

위협했고, 미국은 ‘공해전투(air-sea battle)’ 전략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지역을 내해화 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TPP 협정 체결을 통해 아·태 경제질서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고, 중국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와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및 한·중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을 주도하고자 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미국이 EAS 등 지역 다자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중국은 ‘아시아 신안보관’ 제창을 통해 미국의 역내 개입을 차단하고 지역질서 주도권을 자신이 장악하고자 했다.

2. 트럼프 집권 이후 중미 간 전략적 타협 모색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과정과 당선인 시절 줄곧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가 집권하게 되면 중미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로 특히 중국을 지목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인민폐 평가 절하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속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45%의 고관세를 부과하여 막대한 무역적자 폭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욱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온 나바로를 미 무역위원회 수장에 임명했다는 점도 중미 무역충돌을 예고했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보복 조치를 발동하고 중미 간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 공화당 정부 출범으로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미 갈등 또한 격화될 조짐이 있었다. 트럼프가 미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대만과 단교 이후 최초로 미국 지도자로서 대만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무역불균형문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 이래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 정부가 고수해 온 대만정책을 전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더욱이 2016년 5월 ‘一中各表(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92년 합의' 수용을 거부해 온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중·대만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만문제가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다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바마 집권 2기 중미관계를 군사충돌 직전의 상황으로 악화시켰던 남중국해문제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양국 관계발전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외문제 개입 최소화를 공언했지만, Tillerson 국무장관과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최고 실무책임자들이 남중국해에 미국 군사력을 계속 투입하여 중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것임을 천명해 왔기 때문이다.²⁵ 또한 중국이 AIIB 창설을 계기로 '일대일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는 제2차 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 미국이 누려왔던 지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집권 이후에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중국에 대해 전략적 타협을 추구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고, 중미 간 마찰요인들이 폭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가 출신답게 시진핑과의 빈번한 전화통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전략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핵심국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하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를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이 주장해 온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의를 수용할 것임을 밝히기까지 했다.²⁶ 이에 따라 트럼프 집권 초기 중미는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안보문제에서 특기할만한 갈등을 노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 변화는 4월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개최된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계기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²⁷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고, '전면 경제대화' 등 4개의 대화 기제를 설치·추진함으로써 전략소통을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선포를 유예하는 대가로 북핵문제 등 지역안보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중미 정상회담

²⁵ "Statement of Rex Tillers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7/01/267394.htm>> (검색일: 2017.09.29.).

²⁶ Jane Perlez, "In Beijing, Tillerson and Xi emphasize cooperation," *The New York Times*, March 20, 2017.

²⁷ Jennifer Lind, "Asia's Other Revisionist Power: Why U.S. Grand Strategy Unnerves China," *Foreign Affairs*, vol. 96, no. 2 (March/April, 2017), pp. 74~82.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도와주면 미국으로부터 무역협정에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가 무역문제와 북핵문제 등 지역문제를 연계하여 다뤄나가겠다는 협상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음을 확인해 주었다.²⁸

상인 출신인 트럼프가 중국과의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중미관계가 대립을 제어하면서 전략적 타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²⁹ 트럼프는 무역문제뿐만 아니라 대만문제, 남중국해문제까지도 대중 거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³⁰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북한 핵·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타협을 추구하고 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트럼프는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6차 북핵 실험 이후 일주일 만에 원유수출까지도 제한한 매우 강도 높은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가 단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트럼프-시진핑 간 전화통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³¹ 트럼프는 미국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책임과 개입을 최대화하는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가 오바마 집권 시기에 추진했던 ‘아·태 재균형’ 전략을 폐기하고 중국에 대해 전략적 타협정책을 추구하고 시진핑이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미 간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게 무역불균형문제 해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중국에게 과도한 보복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중미 간 경제교류 협력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 직후 TPP 협상 탈퇴를 결정한 것도 아·태지역에서 중미 간 경제주도권 경쟁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중국도 국내 시장개방 확대 조치 등 대미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사안보 영역에서도

²⁸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2017년 4월 1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해 주면 무역협상에서 중국에게 혜택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851766546825347076>> (검색일: 2017.9.29.).

²⁹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현실주의적 고려에 입각하여 중국에 대해 연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견해는 왕하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 분석: 동인, 목표 및 수단,”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5권 3호 (2017.07), pp. 156~163.

³⁰ 左希迎, “特朗普政府亞太安全戰略的調整,” 『世界經濟與政治』, 第5期 (2017.05), pp. 57~63.

³¹ S. A. Miller, “Trump, Chinese president agree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White House says,”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7/sep/18/donald-trump-xi-jinping-china-agree-maximize-press>> (검색일: 2017.09.29.).

양국은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6월 하순 이후부터 대만에 대해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를 승인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구축함을 진입시키는 한편,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긴장관계가 다시 고조되었지만, 중미는 국내 정치 경제적 고려와 북한문제 등으로 인해 전략적 타협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을 전후로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강한 불만과 압박조치를 가한 의도도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² 2016년 하반기 이후부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작업을 더 이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중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³

Ⅲ. 중미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1. 중미 대립 구조화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오바마 집권 2기 이후 미국이 ‘아·태 재균형’ 정책을 본격화하여 대중 견제정책을 강화하고, 시진핑 등장 이후 중국이 ‘중국몽’ 실현을 주장하면서 공세적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미 간 대결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미 간 대결구조의 심화는 미국의 아·태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중국으로 하여금 대주변국 외교공세를 강화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10월 시진핑을 포함한 7명의 정치국상무위원 모두를 포함한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하여 주변국외교를 강대국외교와 함께 최우선적인 외교대상으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했다.³⁴ 이 같은 중국의 대외정책 방침에 의거, 베이징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정책도 이 같은 미국의 아·태전략에 대한 대응차원

³² 북한이 7월 8일과 24일 연이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뒤 중국에 대해 수퍼-301조 발동 등 초강경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는데, 이는 미국이 상정한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³³ “王毅：現在還在南海真海造地的，那肯定不是中國。”『環球時報』，2017.08.08.

³⁴ 이후 중국은 강대국을 중국외교의 관건(關鍵), 주변국을 중국외교의 첫째(首要), 개발도상국을 중국외교의 기초(基礎), 다자를 중국외교의 무대(舞臺)로 설정하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했다.

에서 집행되었다. 18차 중국공산당 대회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신 지도부가 집권한 뒤 곧바로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무기 실험을 연이어 실시하여 동북아 안보정세를 위협하고 시진핑의 권위에 손상을 가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과거처럼 중국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의해 피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 하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방중 시에도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시진핑은 최룡해 방중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면담을 허용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입장을 강도 높게 밝히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³⁵ 이후 중북관계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여 친한국 행보를 보임에 따라, 김정은 집권 이후 수년 동안 중국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권당 사이에 전략소통이 오랜 기간 차단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지속되었다.³⁶

이 같은 시진핑 집권 초기의 대북 강경정책은 미국이 ‘아·태 재균형’ 전략을 본격화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오바마가 인도를 방문하여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권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도서지역에 미국이 자유항행 원칙 수호 명분하에 항공모함과 구축함, 그리고 B-52 폭격기를 진입시켜 위협하기 시작했다. 또한 오바마는 필리핀 군함에 승선하여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만에 대해 대규모 무기판매를 결정하는 등 중국 견제정책을 노골화했다. 오바마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체결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이 시기였다.³⁷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대미 안보불신을 자극하게 되었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중요한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재인식하도록 했다.

³⁵ “習近平會見金正恩特使,” 『人民日報(海外版)』, 2013.05.25; “社評: 金正恩特使來訪, 中國應堅守立場,” 『環球時報』, 2013.05.23.

³⁶ 2013년 7월 말 북한 전승절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전통우호관계로 지칭하지 않았고, 한국전을 과거와 달리 ‘항미원조전쟁’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선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면서까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2013년 6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장예쭈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사이에 전략대화가 개최되었으나, 양국은 외교부문 전략대화로 급을 낮췄다. 이에 달리 2011년과 2012년에는 중국과 북한 집권당 간 전략대화가 개최되었다.

³⁷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10/05/statement-president-trans-pacific-partnership>> (검색일: 2017.09.29).

이에 중국은 2015년부터 북한과의 경색관계를 끝내고 전통우호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행보를 취하기 시작했다. 2012년과 2013년과 달리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류윈산 중국 정치국상무위원이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중북간 전통우의를 강조했고, 홍레이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015년 1월 김정은 생일을 맞아 “16자 방침에 의거하여 중조 전통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전국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우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7월 중순 지린성 중북 접경지 허룽을 방문하고 장춘 소재 16집단군을 순시한 것도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행보였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류윈산 중국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에게 “피로써 맺어진 친선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전략적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안보전략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임을 강하게 표출했다.³⁸ 이후 중북관계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예전처럼 우호적인 상태로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김정은-시진핑 집권초기에 비해서는 개선 기류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중미 안보갈등 고조가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접근정책을 추동하게 만든 것이다.³⁹

2016년 북한이 2차례나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여 동북아 안보질서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관계 지속 의지를 역설한 이유도 중미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 7월 한·미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국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문제 판결을 전후하여 중미간 안보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 태도가 특히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7월 11일 중북 동맹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북한과 전통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축전을 보냈고, 북한이 7월 9일과 8월 3일 연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중국이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 압박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대북 규탄성명 채택마저 불발되기까지 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대결이

³⁸ “劉雲山談半島問題三個堅持,” 〈<http://sinanews.sina.cn/sharenews.shtml>〉 (검색일: 2015.10.09.); “劉雲山此番出訪朝鮮的不同之處,” 〈<http://china.dwnews.com/news/2015-10-05/59686108.html>〉 (검색일: 2015.10.06.).

³⁹ 王文峯, “東北亞安全形勢與中美戰略關係評析,” 『現代國際關係』, 第6期 (2013), pp. 40~46.

고조되고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여 중미 간 전략핵균형 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포섭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북한 7차 노동당 대회 결과 통보 차 방중한 이수용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주면서 시진핑이 북핵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중북 우호협력을 고도로 중시할 것임을 재확인한 이유도 중미 안보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남중국해문제 중재재판소 판결 직후 개최된 아세안지역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상대했던 사실 역시 중미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내주었다.

한편, 중미 안보갈등의 심화로 인한 중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에게 전략적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중미관계 악화의 틈새를 활용하여 이 시기 3차례나 핵무기 실험을 진행하여 핵무장 속도를 가속화했다. 중미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과 동시에, 북핵 위기관리와 북핵문제 해결에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중미 전략 타협 모색기 중국의 대북정책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중미 간 대립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국이 대내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긴밀한 소통체제를 가동함으로써 2017년 중국과 미국은 경제와 안보 등 제반 영역에서 충돌을 자제하고 타협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바마가 중국의 경제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TPP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중국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해 사용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책임론’을 역설하면서 북한 핵무기·미사일문제 해결의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저지하는데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하기 위해, 트럼프는 시진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17년 4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무역문제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시진핑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고,⁴⁰ 이후에도 남중국해문제와 대만문제 및 무역제재조치를 압박카드로 활용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⁴¹ 마라라고 정상회의 이후 중미는 다양한

⁴⁰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851766546825347076>> (검색일: 2017.09.29).

갈등요인을 통제해 가면서 전략적 타협을 지향해 왔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미국의 군사공격을 불러오고 한반도의 전란이 중국에도 심각한 파급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중국도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역 안보정세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자국의 안보이익에도 직접적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더욱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안보리의 대북 비난성명과 제재결의 채택을 지지하고 있다. 2017년 4월과 8~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으로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에는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위협 및 석탄·철광석·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조치까지 발동하여 북한의 도발을 막고자 했다. 북핵 실전화가가 가까워지면서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군사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대북 압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핵 위기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급박한 우려와 함께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 회담 및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⁴²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이전보다 강력한 태도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북핵 위기 심화가 중미 군사 충돌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북핵·미사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과거보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대미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은 19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중국해와

⁴¹ 트럼프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대대만 군사무기 판매를 연기하면서 4월초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5월까지 남중국해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면서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고자 했다. 2017년 5월 중순 이후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 북극성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은 비로소 남중국해에 구축함과 전투기를 파견하고, 대만에 무기수출을 승인하는 한편,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 압박카드를 적극 가동하여 북핵·미사일 저지에 나서도록 했다. 達巍, “美國對華戰略邏輯的演進與‘特朗普’衝擊,” 『世界經濟與政治』, 第5期 (2017.05.), pp. 35~36.

⁴² 이러한 사실은 2017년 9월 6일과 18일 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S.A. Miller, “Trump, Chinese president agree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White House says,”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7/sep/18/donald-trump-xi-jinping-china-agree-maximize-pressure>> (검색일: 2017.09.29).

대만문제 등 핵심 국가이익으로 간주하는 사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⁴³ 이에 시진핑은 트럼프와 친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전, 전화통화, 정상회담, 그리고 이방카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왔으며, 트럼프 정부가 최우선 안보과제로 설정한 북핵·북한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2017년 미국 주도로 상정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2371호 및 2375호가 순조롭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은 과거에 북한의 민생과 증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대북 석탄·철광석 수입 전면금지 및 원유수입 제한조치까지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군사도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중국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과 트럼프 간 긴밀한 소통체제가 가동됨으로써 중미관계가 협력적으로 유지되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악화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⁴⁴ 2017년 2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안보정세를 위협하자 중국은 북한 석탄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였고, 4월에는 원유공급 중단 및 변경지역 폐쇄조치까지 압박하면서 핵실험을 저지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고, 북한이 중국을 향해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독설을 날릴 정도로 증북관계에 손상을 가했다.⁴⁵ 북한이 6차 핵무기 실험을 한 뒤에는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強烈譴責)한다”는 수사까지 사용했다.⁴⁶ 이는 5차 북핵 실험 때까지는 중국 정부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용어

⁴³ 미·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한편, 2017년 9월 21일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한 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엄격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미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Patricia Zengerle, David Brunnstrom, “China support for North Korea clampdown growing - U.S. official,” <<https://www.reuters.com/article/uk-northkorea-missiles-usa-congress/china-support-for-north-korea-clampdown-growing-u-s-official-idUKKCN1C32GT>> (검색일: 2017.09.29.).

⁴⁴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되고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單仁平, “面對朝核, 中國社會莫做一盤散沙,” <<http://opinion.huanqiu.com/shanrenping/2017-09/11268287.html>> (검색일: 2017.09.21.).

⁴⁵ 김철, “조중관계 기등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행동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17.05.03.

였다. 원유수출 제한 및 섬유수출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을 중국이 수용한 것도 북한에게는 극도의 압박이 될 수 있는 조치였다. 6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시중은행들에게 대북 금융거래 중단을 지시한데 대해 트럼프가 감사를 표시하고, 조선중앙통신이 중국이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⁴⁷ 중미 협력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표 1〉 2012년 이후 중미관계와 중북관계 사이의 상관관계

	중미관계	중북관계
갈등 구조화시기 (2012~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 미국, 신군사전략 발표 · 2013.6 시진핑 주석,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의, 미 불수용 · 2013.11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 2014.5 중국, '아시아 신안보관' 제기 · 2015.5 미 구축함 남중국해 안공섬 12해리 진입 · 2015.10 미국주도 TPP 협상 타결 · 2016.7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4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 2012.4 김영일 국제비서 방중, 2차 당대 당 전략대회 개최 · 2012.8 장성택 행정부장 방중, 경협 합의 · 2013.2 북한 3차 핵실험 · 2013.5 최룡해 총정치국장 방중 · 2013.6 김계관 부상 방중, 외교부문 전략 대화 개최 · 2013.7 리위안차오 부주석 방북 · 2015.10 류원산 상무위원 방북 · 2016.1 북한 핵실험 · 2016.9 북한 핵실험
전략협력 모색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3 킬러스 방중, '신형대국관계 수용 시사 · 2017.4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북핵-무역 빅딜 제의 · 2017.5~8 미, 남중국해, 대만, 무역제재 카드로 중국 압박 · 2017.9 트럼프-시진핑 통화, 안보리 결의 엄격 집행, 대북 압박 최대화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2 중국, 북한석탄 수입중단 결정 · 2017.4 중국, 대북 석유금수조치 압박, 6차 핵실험 저지 · 2017.4~5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중국 강력 비판 · 2017.8 중국, 북한석탄, 철광석, 해산물 수입금지 합의 · 2017.9 북한 수소탄 실험 · 2017.9 중국, 대북 정제유 수출 제한, 섬유제품 수입, 신규 합작사업·금융거래 금지, 중국내 북한기업 폐쇄

⁴⁶ “外交部聲明,” (2017.09.03.) <http://www.fmprc.gov.cn/web/ziliao_674904/1179_674909/t1489453.shtml> (검색일: 2017.09.04).

⁴⁷ “北, 이례적 中 매체 비난 "우리 힘뜰으며 위협하고 망발...간섭 말라,” 『조선일보』, 2017.09.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2/20170922202293.html> (검색일: 2017.09.29.).

IV. 결론

본문에서 필자는 2012년 이후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중미관계 변화와 중북관계 사이에 연계성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자했다. 앞의 <표 1>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진핑 집권 1기 중미 사이에 전략적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안보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는 중국이 북한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을 막아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⁴⁸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면서도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를 중시하여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중국과 북한 지도부 사이에 접촉과 교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중국은 북한에게 북핵 '3원칙'을 수용하도록 설득하였으나, 북한은 중미 간 갈등의 틈새를 십분 활용하여 핵·미사일 도발을 더욱 빈번하게 감행하여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악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협력 상대로 인식하여 중미관계가 비교적 협력적으로 전개되었을 때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기 보다는 북한 정책 및 북핵 정책에서 미국에 협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최고 지도부 사이에 교류와 접촉이 단절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었다. 중북 간 전략소통이 차단되면서, 북한은 과거 자신이 주장해 온 내용이 담긴 비핵화-평화협정 체결과 핵·미사일 도발 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쌍궤병행'과 '쌍중단' 제안에 대해서도 공식 반대하고 있다. 국제고립 심화로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의미다.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수록, 북한은 중국을 불신하고 중북관계는 경색되는 경향을 보였다. 19차 당 대회와 중미 정상회담 결과를 통보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개진을 위해 평양에 특사로 파견되었던 송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을 통해서도 중미 협력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⁴⁸ 반면, 북한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등 중미 사이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서 중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을 '완충지대'로 볼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李晨陽, "地緣緩衝區與中國周邊安全," 『世界知識』, 第18期 (2017.09.17.), p. 73.

상기 연구 결과는 시진핑 시기 중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대미관계를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고려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대중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의해서 중국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중국과의 협상을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가 대만문제나 남중국해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무역문제 등 중국이 중시하는 국익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다루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중국방문을 앞두고 중미 간 빅딜을 주장해 온 키신저 박사에게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⁴⁹ 그러나 중미가 전략적 타협을 모색하고 중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핵 정책에 협력할수록 북한의 대중 불신은 심화되면서 중북 간 전략적 소통채널이 차단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미가 갈등관계를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지만, 한국의 안보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도 중미의 이해관계가 합치될 때 해법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미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외교안보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미 갈등을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행동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대타협 안을 모색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직까지는 북한 핵문제를 군사력 사용 보다는 최대한 압박을 통한 협상방식의 해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⁵⁰ 결국은 대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중국과의 주고받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⁵¹ 이에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대화채널을 유지해야 하며, 한·미·중 3자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가동함으로써 중미 협상과정에 한국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

⁴⁹ Asawin Suebsaeng, "Kissinger Meets Trump to Advise on North Korea, China," <<https://www.thedailybeast.com/kissinger-meets-trump-to-advise-on-north-korea-china>> (검색일: 2017.10.11.).

⁵⁰ Dan Merica, "White House chief of staff: Americans should be concerned about North Korea," <<http://edition.cnn.com/2017/10/12/politics/john-kelly-north-korea/index.html>> (검색일: 2017.10.12.).

⁵¹ 중국 난징대학 주평 교수도 중국과 미국이 지역질서의 '재알타화(再雅爾塔化)'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朱鋒, "特朗普政府對朝鮮的強制外交," 『世界經濟與政治』, 第6期 (2017), p. 74.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傅瑞珍, "美中關係在危機邊緣," <http://www.uscnpm.com/model_item.html?action=view&table=article&id=14178> (검색일: 2017.09.24.).

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미가 전략적 타협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수록 중북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하되 중국에 대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미의 타협과 중북 관계 소원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안보위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제출: 10월 13일 ■ 심사: 11월 3일 ■ 채택: 12월 1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14.

2. 논문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6.

왕하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 분석: 동인, 목표 및 수단.” 『성균 차이나브리프』. 제5권 3호, 2017.07.

정재호. “2013년 시점에서 평가하는 미·중관계.” 『2013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

_____. “2015년 미·중관계의 평가와 양국 간 상호인식(II).” 『2015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6.

_____. “미·중관계에서의 상호인식의 문제.” 『2014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15.

홍은정.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9권 4호, 2016.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Godwin, Paul. “Asia’s Dangerous Security Dilemma.” *Current History*. vol. 109, no. 728. 2010.

- Kearn, David. "Air-Sea Battle and China's Anti-Access and Area Denial Challenge." *Orbis*. vol. 58, issue. 1. 2014.
- Le Miere, Christian. "Rebalancing the Burden in East Asia." *Survival*. vol. 55, no. 2. 2013.
- Liao, Kai. "The Pentagon and the Pivot." *Survival*. vol. 55, no. 3. 2013.
- Lind, Jennifer. "Asia's Other Revisionist Power: Why U.S. Grand Strategy Unnerves China." *Foreign Affairs*. vol. 96, no. 2. March/April, 2017.
- Maurer, John H. "A Rising Power & the Coming of a Great War." *Orbis*. vol. 58, issue. 4. 2014.
- Rozman, Gilbert. "Reassessing the U.S. Rebalance to Northeast Asia." *Orbis*. vol. 59, issue. 3. 2015.
- Tellis, Ashley J.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A U.S. Strategy for Confronting China'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4. 2013.

- 高程. "周邊環境變動對中國崛起的挑戰." 『國際問題研究』. 第5期, 2013.
- 達巍. "構建中美新型大國關係的路徑選擇." 『世界經濟與政治』. 第7期, 2013.
- _____. "美國對華戰略邏輯的演進與'特朗普'衝擊." 『世界經濟與政治』. 第5期, 2017.
- 杜蘭. "美國力推跨太平洋伙伴關係戰略論析." 『國際問題研究』. 第1期, 2011.
- _____. "美國調整對緬甸政策及其制約因素."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2.
- 劉德會. "美緬關係的改善及對中國的影響." 『國際政治』. 第6期, 2014.
- 徐瑤. "冷戰後美國亞太軍事基地體系的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第9期, 2013.
- 楊潔勉. "新型大國關係: 理論, 戰略和政策建構."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13.
- 楊潔篪. "做好新形勢下外交工作的行動指南." 『中國外交』. 第2期, 2013.
- 楊伯江. "美國戰略調整背景下日本全面正常化走向探析." 『國際政治』. 第6期, 2013.
- 王達. "亞投行的中國考量與世界意義." 『東北亞論壇』. 第3期, 2015.
- 王文峯. "東北亞安全形勢與中美戰略關係評析." 『現代國際關係』. 第6期, 2013.
- 于洪君. "中美構建新型大國關係的意義與前景." 『國際問題研究』. 第5期, 2013.
- 李晨陽. "地緣緩衝區與中國周邊安全." 『世界知識』. 第18期, 2017.
- 張茗. "奧巴馬政府亞太軍事再平衡剖析." 『現代國際關係』. 第4期, 2013.
- 鄭必堅. "21世紀第二個十年的中國和平發展之路."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13.
- 左希迎. "特朗普政府亞太安全戰略的調整." 『世界經濟與政治』. 第5期, 2017.
- 朱鋒. "特朗普政府對朝鮮的強制外交." 『世界經濟與政治』. 第6期, 2017.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周邊戰略形勢與中國周邊戰略." 『現代國際關係』. 第10期, 2013.
- 蔡翠紅. "中美關係中的修昔底德陷阱話語."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16.

3. 기타

- 『동아일보』.
-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CNN <<http://edition.cnn.com>>.

Financial Times.

Forbes <<https://www.forbes.com>>.

National Interest <<http://nationalinterest.org>>.

Reuters <<https://www.reuters.com>>.

The Daily Beast <<https://www.thedailybeast.com>>.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Times <<http://www.washingtontimes.com>>.

DW News <<http://china.dwnews.com>>.

Huanqiu <<http://opinion.huanqiu.com>>.

SINA <<http://blog.sina.com.cn>>.

『人民日報(海外版)』.

『環球時報』.

주북한 중국대사관 <<http://kp.china-embassy.org>>.

중국 외교부 <<http://www.fmprc.gov.cn>>.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

Donald J. Trump Twitter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archive.defense.gov>>.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US-China Perception Monitor <<http://www.uscnpm.com>>.

Abstract

Changes in the Sino-U.S. Relations and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Xi Jinping's First Leadership Period

Shin Sang J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China's North Korea policy is and will be influenced and determined by a grand strategy game between China and U.S. And the author tries to verify whether there are linkages between the changes of the Sino-U.S. relationship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since 2012.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When the strategic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China and the U.S. was not smooth and the conflicts deepened, China tended to regard North Korea as a strategic buffer zone against the American containment policy to China. China has pursued a policy of embracing North Korea with an emphasis on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contacts and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he North Korean leaders has remained relatively smooth. When this situation is established, North Korea has fully utilized the gaps in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S. to launch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more frequently and exacerbate th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when the U.S. treats China as a strategic partner and cooperates with it, China has shown a tendency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in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policy, rather than emphasizing friendship with North Korea.

Key Words: Sino-U.S. relations, China's North Korea policy, Xi Jinping, Kim Jong Un, Donald Trump

